

민주·정의 ‘50억클럽 특검’ 공감… 추천 권한 ‘이견’

박홍근-이은주 원내대표 회동
민주 “다수 의석 당, 통로 역할”
정의 “거대 양당 추천 제외돼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공식 통로여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의견에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인 불공정 수사가 갈수록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50억 클럽, 고위 검사 출신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과상도 전 의원 수사만 나섰고 그마저도 부실 수사로 일관해 ‘5년 재직, 50억 퇴직금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로 귀결됐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윤석열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로잡는 시작점”이라며 “오직 시간끌기로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확인되다시피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고 본다”며 “정의당도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대로 양쪽

검을 정의당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평균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가 작년 기준 1억5000만원”이라며 “그런데 과전 의원의 아들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결국 과전 의원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공분에 대해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

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고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권한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다보니 특검 추천을 위한 공식적인 형식에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며 “실질적인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정의당도 그런 취지로 자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지난 BBK, 최순실, 드루킹 특검은 모두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배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민적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양당은 특검 추천권한을 놓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왜 양당이 추천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제적대상인지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에 대한 협의가 남았다”고 전했다.

또 “내일(7일) 정의당 의원총회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대표성,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추천 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당정,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법제화 시동

국민의힘은 6일 정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학계 등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 토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의 소유권 보장과 거래 방식 확립 등 보호 규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형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

정부가 6일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1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는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별 연장근로 시간은 ‘월’은 52시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부실증권의 획기적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나,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증권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방향성의 당위를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들여 일정 요건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규제와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진표 의장·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 합의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직접 만나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정치

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김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원회 구성 일정에 여야가 큰 이

견 없이 합의한 만큼 이후 일정도 이 로드맵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與 전대 개입 의혹’… 안철수·천하람·황교안 “金 사퇴해야”

김기현 “금지된 것 아냐” 반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의혹의 책임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공무원의 단체 활동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라면 당대표 경선에 명백히 개입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공천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연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 좀 느껴 달라”고 적었다.

천 후보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김기현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며 “왜 김기현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본인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 즉각 징계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당원의 힘으로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 ‘민폐후보’인

김기현 후보 낙선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도 “진심으로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한다면 김기현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황 후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며 “그래서 그동안 제가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믿으며 대통령 팔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수차례 경고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김 후보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동작을 당협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가 사실 관계인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싶다”면서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 할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